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6910
----------	------

제안연월일 : 2024. 12.

제안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법률안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일	심사경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319	한정애의원	2024.7.3.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4.9.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391	서영교의원	2024.7.4.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4.9.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514	조정식의의원	2024.7.9.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4.9.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517	민병덕의원	2024.7.9.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4.9.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517	민병덕의원	2024.7.9.	소위 심사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법률안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일	심사경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172	윤준병의원	2024.7.24.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4.9.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252	김태선의원	2024.7.25.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4.9.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381	천준호의원	2024.7.30.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4.9.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821	박성준의원	2024.8.14	소위원회 직접회부(2024.9.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893	천준호의원	2024.8.16.	소위원회 직접회부(2024.9.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100	박상혁의원	2024.8.22.	소위원회 직접회부(2024.9.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233	최형두의원	2024.8.27.	소위원회 직접회부(2024.9.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677	정태호의원	2024.9.5.	소위원회 직접회부(2024.9.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법률안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일	심사경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042	김선교의원	2024.9.13.	소위원회 직접회부(2024.9.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194	강민국의원	2024.9.23.	소위원회 직접회부(2024.9.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219	김현정의원	2024.11.4.	소위원회 직접회부(2024.11.22.)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2. 03.)

는 위 15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24. 12. 03.)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1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서민·취약계층이 금융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불법채권추심을 동반한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이 횡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는 등에 따른 범죄피해 확산 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부업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불법업체 난립 등으로 인해 대부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도 낮은 실정임.

이에,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 등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7호·제8호 등).

나.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함(안 제3조제2항제6호).

다. 시·도지사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1천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하며,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도입함(안 제3조의5).

라.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마.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함(안 제11조).

바. 불법사금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 형량을 징역 10년 이하·벌금 5억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19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전의 대부”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로,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다음”을 “이하 “대부”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부중개를”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불법사금융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불법사금융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자적 장치·시스템 등을 통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하 “대부중개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 제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갖추어야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고정사업장”을 “고정사업장, 인력과 전산설비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가.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그 외의 자: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3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갖추어야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 1억원 이상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가목 이외에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그 외의 자: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 등”을 “대부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1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각 호”를 “제2항”으로 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던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②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은 다른 대부업자 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부업자등이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는 행위
2. 대부업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유통하는 행위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부제공자”라 한다)는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대부계약 과정에서 대부제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음

성물 또는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수집
·제공·유통하는 행위

나. 인신매매, 신체의 상해 또는 포기, 장기기증, 강제취업, 강제노동 등 개인의 신체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3. 대부계약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부이자율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부제공자의 거래상대방은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의 교부가 면제 또는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에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와 달리 허위로 기재된 경우
제9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정부기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나. 서민 등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제9조의4의 제목 중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를 “불법사금융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 한다)”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선임된 자
제9조의6의 제목 중 “대부광고”를 “대부행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광고를 발견한 때에는”을 “광고나 이 법 또는 「채권의 공

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법대부행위등“이라 한다)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발견 또는 확인한 때에는”으로, “광고에 사용된”을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이의신청”을 “전화번호의 확인·신고, 이의신청”으로 한다.

- ④ 누구든지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제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9(대부업 이용자의 정보 보호) ① 대부업자는 대부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중개를 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대부업 이용자의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 제목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하며,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대부중개를 하여서는”을 “대부중개를 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중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제1항 중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등”을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포함한다)은 대부업등(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① 누구든지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3조의5제1항제3호”를 “제3조의5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3조의5제2항제1호·제2호”로, “충족하지”를 “유지하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 각 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10년”으로, “5천만원”을 “5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제1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미등록대부업자”

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2.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3.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유통한 자
4. 제9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 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한 자
5. 제9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별표 1 제2호의2 중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제3조 및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자등에 재직 중인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 및 제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 중 “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②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를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로 한다.

③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 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 ----- ----- -----이하 “대부”라 한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다음----- ----- ----- ----- -----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3. ~ 6. (생략)

<신설>

<신설>

제3조(등록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

3. ~ 6. (현행과 같음)

7. “불법사금융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불법사금융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생 략)

③ ~ ⑧ (생 략)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2. (생 략)

6. 전자적 장치·시스템 등을 통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하 “대부중개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단서 삭제>

가.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그 외의 자: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현행과 같음)

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4. (생략)

5.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나. (생략)

다. 최근 1년간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라. (생략)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생략)

2.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고정사업장, 인력과 전산설비 등-----

4. (현행과 같음)

5.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3년-----

라. (현행과 같음)

② -----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단서 삭제>

<신 설>

<신 설>

<신 설>

3. ~ 7. (생 략)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6. (생 략)

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가.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가목 이외에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그 외의 자: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 7. (현행과 같음)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

-----대부업자등-----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
-----3년-----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7.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7. (현행과 같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을 겸할 수 없다.

<삭 제>

<삭 제>

<삭 제>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
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
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
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
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
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
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
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
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
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
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
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
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
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③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
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 또는

<삭 제>

<삭 제>

③ -----

<p><u>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u> <u>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u></p> <p>제5조의2(상호 등) ① ~ ④ (생략)</p> <p>⑤ <u>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제2항-----</u> <u>-----.</u></p> <p>제5조의2(상호 등) ① ~ ④ (행과 같음)</p> <p>⑤ <u>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1. <u>대부업자등이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는 행위</u></p> <p>2. <u>대부업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유통하는 행위</u></p> <p>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부제공자”라 한다)는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u></p>
--	---

1. 대부계약 과정에서 대부제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는 행위

나. 인신매매, 신체의 상해 또는 포기, 장기기증, 강제취업, 강제노동 등 개인의 신체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3. 대부계약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9조, 제10조, 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부이자율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부제공자의 거래상대방은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의 교부가 면제 또는 대체 가능한

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①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
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
에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
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와
달리 허위로 기재된 경우

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
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정부기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
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
인될 수 있는 표현

나. 서민 등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조의4(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① -----불법사금융업자

<p><u>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u> (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대부업자는 <u>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u>(이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생략)</p> <p>제9조의5(고용 제한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2. (생략)</p> <p><u><신 설></u></p> <p>② (생략)</p> <p>제9조의6(불법 <u>대부광고</u>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p> <p>①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p>	<p>-----.</p> <p>② -----<u>불법사금융중개업자</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5(고용 제한 등) ①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선임된 자</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6(불법 <u>대부행위</u>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p> <p>① -----</p>
--	---

로 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광고나 이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법대부행위등”이라 한다)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발견 또는 확인한 때에는-----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누구든지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전화번호의 확인·신고, 이의신청-----

제9조의9(대부업 이용자의 정보 보호) ① 대부업자는 대부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를 제공하기 위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단 신설>

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중개를 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대부업 이용자의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① 불법사금융업자-----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 ⑥ (생략)

<신 설>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
-----불법사금융업자-----
-----대부중개를 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중개시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

② -----

-----불법사금융중개업자-----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포함한다)은 대부업등(사실

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생략)

<신설>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 대부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① 누구든지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생략)

②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3조의5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단서 신설>

-----.

1. -----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

2.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의5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3조의5제2항제1호·제2호의-----유지하지-----
-----. 다만, 일시적으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p>2의2. ~ 8. (생략)</p> <p>③ ~ ⑤ (생략)</p> <p>⑥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u>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u></p> <p>1. ~ 3. (생략)</p> <p>⑦ · ⑧ (생략)</p> <p>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1. ~ 3. (생략)</p> <p>4. <u>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u></p> <p>5. <u>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u></p> <p><u><신설></u></p>	<p><u>제12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u></p> <p>2의2. ~ 8.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제1항제1호</u>-----</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⑦ · ⑧ (현행과 같음)</p> <p>제19조(벌칙) ① -----<u>10년</u>-----</p> <p>-----<u>5억원</u>-----</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u><삭제></u></p> <p><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u>1.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u></p>
---	---

<신 설>

- 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2.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3.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유통한 자
4. 제9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 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한 자
5. 제9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생략)</p> <p>1의2. <u>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u></p> <p>2. (생략)</p> <p>3. <u>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u></p> <p>4. <u>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u></p> <p>5. ~ 10. (생략)</p> <p>③ (생략)</p>	<p>2. <u>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u></p> <p>④ ----- ----- ----- -----.</p> <p>1.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2.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4. ----- -----불법사금융업자----- ----- -----불법사금융중개업자----- -----</p> <p>5. ~ 10. (현행과 같음) ⑤ (현행 제3항과 같음)</p>
--	--